

## 시·군 공무원 '현대판 음서제' 판친다

### 단체장 선거공신·친인척, 고위직 자녀들 시험 없이 슬그머니 계약직 채용

2년 뒤 '정년 보장' 무기직 전환 ... 전남도, 대대적 감사 나서

공무원 채용 경쟁률이 갈수록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 각 시·군이 정해진 규정도 없이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선 자치 이후 단체장 선거를 도운 인사나 친인척, 또는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을 공개채용이 아닌 추천에 의한 서류·면접 등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 계약직 공무원으로 뽑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들 계약직 공무원은 2년 근무 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어 채용 절차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남도는 최근 시·군의 계약직 및 일용직 채용과 관련 문제점이 발견돼 10개 시·군에 대해 전격 감사에 착수했다. 광양시,

무안군, 고흥군, 곡성군 등 4개 시·군은 이미 감사를 마쳤고, 나머지 6개 시·군은 올해 하반기까지 채용 과정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전남도는 감사과정에서 이들 시·군이 계약직을 공개채용 방식이 아니라 실·과장 추천이나 인사 주무부서에서 총괄해 이력서만 받아 면접을 거치는 등 선발 절차가 불투명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시의 경우 지난해 계약직 154명, 청원경찰 18명 등 172명이었던 계약직 인원이 올해 들어 각각 173명, 24명 등 197명으로 모두 25명 증가했다. 공무원 정원이 624명인 무안군은 사무보조원 81명, 청원경찰 14명 등 135명의 계약직이 근무하고 있는

며, 인사주무부서에서 선발을 맡았다.

고흥군은 무기계약직 포함 무려 327명의 계약직이 있으며, 지난해에만 41명의 계약직이 정년을 보장받는 무기계약직이 됐다. 국·도비 보조 사업과 관련된 계약직은 공채하지만 나머지는 별다른 규정 없이 기존 공공근로자나 실·과장이 추천한 사람을 임의로 뽑고 있다.

이외에도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임기제 공무원 수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말 개방형 및 임기제 공무원의 수는 전남도 60명, 시·군 104명 등 164명이었으나 4년이 지난 2014년 말 현재 전남도 75명, 시·군 113명 등 188명으로, 24명이 늘었다.

시·군은 정원이 관련 법으로 규제되는 직원 수는 그대로 두고 비교적 규제가 느슨한 계약직 공무원을 대거 뽑았으나, 그

동안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전남도의 관리·감독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또 공직 내부의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 화하자는 움직임 속에 이들 계약직들의 근무연한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보장해주면서 공무원 준비생들의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각 시·군의 채용 절차와 방식이 각기 달라 불투명성이 높고, 서류 심사 및 면접에 단체장이나 고위공무원의 개입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구직자의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 시·군의 계약직 채용 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알립니다

세상을 보는 '창'... 신형철·함정임 칼럼 신습니다

매주 수요일 5면에 연재돼 사랑을 받았던 '문순태 칼럼'과 '한승원 칼럼'이 2년 간의 대장정을 마칩니다. 5월부터는 첫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에 '신형철 칼럼'과 '함정임 칼럼'이 독자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신형철 평론가 함정임 작가

'제2의 김현'으로 불리는 신형철 평론가와 이상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한 함정임 작가의 글은 독자 여러분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신형철 평론가

▲서울대 국문과 및 동대학원 졸업 ▲'문학동네' 편집위원 ▲현 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 ▲저서 '몰락의 에티카' 등 다수

◇함정임 작가

▲이화여대 불문과 및 중앙대 대학원 졸업 ▲199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등단 ▲현 동아대 한국어문학부 교수 ▲저서 '저녁 식사가 끝난 뒤' 등 다수

光州日報社

## 이병석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 "국회의원 정수 늘어날 수 있다"

광주일보-한신협 공동 인터뷰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이병석 위원장은 6일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1로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침해 받게 된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등을 도입하다 보면 몇 석 정도 의원정수를 늘리는 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의원 정수 증가 불가파하다는 것을 시사한 발언이어서 향후 정개특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새누리당 소속인 이 위원장은 이날 광주일보 등 전국 9개 유력지방지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힌 뒤 "현재 국민의 눈은 (국회 의석수) 단 한 석도 늘릴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기술적으로 다루다 보면 (국회의원 의석수) 미세한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선관위도

이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국민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정치 혁신을 하려다 보니 의원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동의 절차를 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농어촌지역 선거구 감소 논란과 관련, "현재의 결정이 인구대표성을 강조하다 보니 농어촌지역 등의 지역대표성이 심대하게 타격받는다"며 "이를 보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에 대해 이 위원장은 "두 제도는 우선 농어촌지역 대표성 침해를 보정하는 의미가 있고 특정 정당 일부 지역 독점현상 완화와 사표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두 제도 중 적어도 하나는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U대회 시상식 시연회

6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여자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시상식 시연회'에서 시상요원으로 참가한 광주여대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이 입장에서 퇴장까지 시상행사 전반을 선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21면

## 새누리,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 단독처리...공적연금 개혁안 '진통'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여당 단독으로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158명 중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임명동의안 표결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다. 이로써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1월26일 국회에 제출된 100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새정치연합 등 야권은 그동안 박 후보자

가 검사 재직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대법관 임명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공적연금 개혁안을 놓고 진통을 계속했다.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법안의 부칙에 별도문서로 첨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최고위가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재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2015, 광주

170여개국 세계 대학생 올림픽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Global Premium Partner

Official Partner

Official Sponsor

기간 및 장소 : 2015. 7. 3 ~ 14(12일간), 광주 및 인근 시군 경기장    종목 및 규모 : 21개(정식13개/선택8개), 170여개국 2만여명

정식종목

선택종목

2015광주유니버시아드 홍보대사 수지